62.[사설] 영남권 신공항 갈등과 정치·언론의 책임

[한겨레]

23~24일로 예정된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발표를 앞두고, 해당 지역의 정치인과 언론사들이 갈등 조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밀양을 지지하는 대구·경북·경남·울산과, 가덕도를 미는 부산 사이의 지역 대결이 단순한 공항 유치 운동 차원을 넘어 마치 ‘내전’을 방불케 하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여기에 기름을 붓고 있는 주도 세력이 다름 아닌 갈등의 조정과 공정한 보도를 생명으로 삼아야 마땅할 정치인과 언론이라는 사실에 실망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각기 가덕도와 밀양을 지지하는 부산과 대구 지역의 주요 일간지 10일치 1면 머리기사 제목을 보면, “‘PK여론’ 전달할 창구가 없다”(<부산일보>), ““가덕도 신공항” 외치는 문재인”(<매일신문>), “가덕도 육-해상 걸친 활주로 장기적 ‘부동 침하’ 불가피해”(<영남일보>) 등으로 상대의 입지조건이나 운동을 폄하하는 내용으로 도배가 되어 있다. 이날치만 그런 것이 아니다. 연일 이런 제목의 기사와 논평이 줄을 잇고 있다.  
  
정치인들의 행태는 더욱 가관이다. 최근엔 야당의 차기 대선 주자로 유력한 문재인씨가 가덕도를 방문해 “부산 시민들이 입지 선정 평가가 공정한지 걱정하고 있다”고 한 발언이 풍파를 일으켰다. 그러나 공정성에 의심을 갈 만한 발언을 먼저 해 지역 갈등에 불을 지핀 사람은 대구의 친박계 조원진 의원이었다. 그는 3월 대구시당 총선 발대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에 선물 보따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밀양이 사실상 신공항 입지로 굳어진 것처럼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 부산시당과 더불어민주당도 질세라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거는 등 대구·경북 대 부산·경남의 자존심 대결이 격화하였다.  
  
5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큰 사업이 어디에서 실시되느냐는 두 지역의 큰 관심사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그것은 국가 전체 이익 차원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해야 할 일이지, 내 지역이 아니면 안 된다는 억지 논리로 정해져선 곤란하다. 그러지 말라고 선정 용역을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에 맡긴 것이 아닌가.  
  
해당 지역 정치인과 언론은 근거 없는 갈등 조장 행위를 중단하고, 국익 차원에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앞장서기 바란다. 영남권 신공항 갈등은 정치와 언론의 책임을 묻는 중요한 실험대이기도 하다.